

선관위 향한 불만 이용하려는 극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극우는 의도적인 과장과 비약으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유권자의 선거권은 침해됐다. 유권자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해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볼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6.3 지방선거는 부실선거였다.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과장과 비약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세력은 국지적인 선거 관리 실패를 선거 전체의 무효화로 확대 해석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심각한 비약이다.

극우 세력은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분노를 교묘히 이용한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것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극우의 재선거 선동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을 봉쇄한 주체는 평범한 2030이 아닌 극우 세력이다. 이들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시위의 성격이 '순수한' 2030 시위에서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 시위로 변질됐다고 보도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초기부터 극우 세력이 주도했다.

“재선거” 구호는 극우의 지능적인 전술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청년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호를 통일한 것이다. 반면 선명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를 직접 외쳐야 한다는 부류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 세력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 전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보지만, 그 기회를 이용할 방식을 두고 갈등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위 구호가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로 바뀐 것은 시위 주도권의 변화를 보여 준다(그런데 사실 수개표는 이미 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둔 점은 옳으나, '정치적 중립'과 거리 두기만으로는 극우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여러 대학 총학생회는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뒀다. 이는 정당하고 옳으나 극우의 준동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

총학생회는 극우가 투표 관리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점을 폭로하고 정면 비판하기를 회피했다. 가령 총학생회의 성명과 시국 선언문은 선관위 비판에서 멈추고 그 비판에도 과장과 비약이 있다. 특히, 극우를 향한 명확한 비판이 없다. 극우는 그 점을 파고들어 총학생회의 선관위 규탄을 자신들의 의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다행히 일부 학생들의 폭로와 항의 덕분에 극우 세력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에서는 자유 발언에 나서 극우의 실체와 목적을 폭로한 학생들이 있었다. 서울대와 건국대에서는 극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자를 참칭하는 극우의 “재선거” 시국선언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극우를 정면 규탄하고 폭로하는 주장과 행동이 없었다면,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의제가 대학생 사이에서 유력한 여론이 되고 있다고 호도했을 것이다.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교활한 목적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 “재선거”를 선동하는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다.

청년·학생들의 분노를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극우 세력을 막아 세워야 한다.

2026년 6월 1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https://youth.ws.or.kr

@ws_youthstu

010-5443-2395

youth@ws.or.kr



선관위의 항한 불만 이용하려는 극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극우는 의도적인 과정과 비약으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투표소에서 받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유권자의 선거권은 침해됐다. 유권자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해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볼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6.3 지방선거는 부실선거였다.

총학생회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둔 점은 옳으나, '정치적 종립'과 거리 두기만으로는 극우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다
여러 대학 총학생회는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뒀다. 이는 정당하고 옳으나 극우의 준동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

총학생회는 극우가 투표 관리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점을 폭로하고 정면 비판하기를 회피했다. 가령 총학생회의 성명과 시국 선언문은 선관위 비판에서 멈추고 그 비판에도 과정과 비약이 있다. 특히, 극우를 향한 명확한 비판이 없다. 극우는 7 점을 파고들어 총

학생회의 선관위 규탄을 자신들의 의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다행히 일부 학생들의 폭로와 항의 덕분에 극우 세력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에서는 자유 발언에 나서 극우의 실체와 목적을 폭로한 학생들이 있었다. 서울대와 건국대에서는 극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자를 참칭하는 극우의 “재선거” 시국선언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극우를 정면 규탄하고 폭로하는 주장과 행동이 없었다면,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의제가 대학생 사이에서 유력한 여론이 되고 있다고 호도했을 것이다.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교활한 목적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 “재선거”를 선동하는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다.

청년·학생들의 분노를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극우 세력을 막아 세워야 한다.

2026년 6월 1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과장과 비약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세력은 국지적인 선거 관리 실패를 선거 전체의 무효화로 확대 해석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심각한 비약이다.

극우 세력은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교묘히 이용한다. 이들의 공격적 목적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것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극우의 재선거 선동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을 봉쇄한 주체는 평범한 2030이 아닌 극우 세력이다. 이들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시위의 성격이 ‘순수한’ 2030 시위에서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 시위로 변질됐다고 보도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초기부터 극우 세력이 주도했다.


“재선거” 구호는 극우의 지능적인 전술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청년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호를 통일한 것이다. 반면 선명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를 직접 외쳐야 한다는 부류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 세력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 전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보지만, 그 기회를 이용할 방식을 두고 갈등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위 구호가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로 바뀐 것은 시위 주도권의 변화를 보여 준다(그런데 사실 수개표는 이미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_youthstu

 @ws.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s.or.kr>

 youth@ws.or.kr



선관위 항 이용하려고 단호히 맞

**극우는 의도적인 과장과 비약으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유권자의 선거권은 침해됐다. 유권자들이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해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볼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6.3 지방선거는 부실선거였다.

향한 불만 는 극우에 서야 한다

총학생회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둔 점은 옳으나, '정치적 중립'과 거리 두기만으로는 극우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여러 대학 총학생회는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를 뒀다. 이는 정당하고 옳으나 극우의 준동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

총학생회는 극우가 투표 관리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점을 폭로하고 정면 비판하기를 회피했다. 가령 총학생회의 성명과 시국 선언문은 선관위 비판에서 멈추고 그 비판에도 과장과 비약이 있다. 특히, 극우를 향한 명확한 비판이 없다. 극우는 그 점을 파고들어 총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과장과 비약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세력은 국지적인 선거 관리 실패를 선거 전체의 무효화로 확대 해석하려 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심각한 비약이다.

극우 세력은 선관위의 무능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교묘히 이용한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것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극우의 재선거 선동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재선거를 외치며 경기장을 봉쇄한 주체는 평범한 2030이 아닌 극우 세력이다. 이들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부 언론은 시위의 성격이 ‘순수한’ 2030 시위에서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 시위로 변질됐다고 보도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초기부터 극우 세력이 주도했다.

“재선거” 구호는 극우의 지능적인 전술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청년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호를 통일한 것이다. 반면 선명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를 직접 외쳐야 한다는 부류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 세력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 전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보지만, 그 기회를 이용할 방식을 두고 갈등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위 구호가 “재선거”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로 바뀐 것은 시위 주도권의 변화를 보여 준다(그런데 사실 수개표는 이미 하고 있다).

학생회의 선관위 규탄을 자신들의 의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다행히 일부 학생들의 폭로와 항의 덕분에 극우 세력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에서는 자유 발언에 나서 극우의 실체와 목적을 폭로한 학생들이 있었다. 서울대와 건국대에서는 극우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자를 참칭하는 극우의 “재선거” 시국선언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벌였다.

극우를 정면 규탄하고 폭로하는 주장과 행동이 없었다면,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의제가 대학생 사이에서 유력한 여론이 되고 있다고 호도했을 것이다.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교활한 목적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 “재선거”를 선동하는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자들이다.


청년·학생들의 분노를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극우 세력을 막아 세워야 한다.

2026년 6월 1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_youthstu

 @ws.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s.or.kr>

 youth@ws.or.kr

